

2004년 경기전망과 시사점



심 영 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1. 머리말
2. 새해에는 완만한 경기회복 기대
3. 주요 산업의 내수·수출 호조 예상
4. 2004년 경제의 관전 포인트
5. 경기순환인가 구조불황인가
6. 일본식 장기불황의 조짐은 없는가?
7. 경계해야 할 잠재성장률 하락
8. 경제운용의 시사점
9. 기업경영의 시사점

1. 머리말

산업연구원(KIET)은 2003년의 성장률이 3% 정도에 머물겠지만, 2004년에는 5.5%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단 산업연구원뿐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전망기관들이 한결같이 경기회복을 예상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마침내 침체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아직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의 열쇠를 쥔 내수와 설비투자가 아직까지는 힘차게 경기부진을 털고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내년도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산업연구원을 비롯한 대부분 전망기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2004년도 성장률 예상치가 5%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외경기의 회복세가 확산되면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이 확실한데도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이다. 2003년에 마이너스의 성장을 나타낸 소비와 설비투자의 반등세가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내년도 상황은 단순히 경기변동의 측면만 살펴볼 일이 아니다. 수출수요와 국내수요 간에 양극화 현상이 어떻게 해소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가 2004년도 경기의 관전 포인트이다. 게다가 새해에는 총선, 주5일 근무제의 실시 등과 같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다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이 점을 유념하면서 새해 경기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새해에는 완만한 경기회복 기대

새해의 경기회복에 대해 신중하나마 낙관론이 확산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출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근거를 둔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져 수출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해외수요가 경기를 이끌고, 하반기에는 국내수요가 경기를 끌고 가는 양상을 보이리라는 전망이다.

먼저 새해의 수출전망부터 살펴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이 2003년에는 20% 가까이 증가하여 예상 밖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다 보니 전망기관들은 한결같이 내년도에 선진국의 경기회복 확산에 힘입어 수출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그 증가율은 2003년에 못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이보다 훨씬 과감한 전망을 해 보고 싶다. 우리의 최대시장인 중국의 성장탄력과 수요확대가 확실하고 선진국 경기가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게 과감한 전망의 근거이다. 다만

그동안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공급예로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걱정될 뿐이다.

그동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던 설비투자의 경우 새해에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완만하지만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와는 달리 설비투자는 2003년 4/4분기부터 침체의 늪을 탈출하는 신호가 미약하나마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설비투자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국내기계수주가 4/4분기부터 그동안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만 설비투자가 곧바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이 새해에도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신중한 움직임은 보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감안해 보면, 대체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비투자와 달리 건설투자의 경우는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여파로 경기가 2003년보다 새해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새해 경기회복의 키워드가 될 민간소비는 아직 낙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소비가 새해에는 플러스로 반등하기는 하겠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그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을 예상된다.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소비자평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신뢰지수, 할인점 및 백화점 매출동향 등 소비관련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2003년 9월을 저점으로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조금씩 풀려나간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들

(국내 전망기관의 2004년 경기전망)

% (전년동기 대비)

구 분	KDI	한국은행	금융研	KIET	LG研	현대研	한경연	삼성研
성장률	5.3	5.2	5.8	5.5	5.1	4.5	4.8	4.3
민간소비 증가율	3.4	3.2	3.9	4.3	4.9	4.1	2.5	2.9
설비투자 증가율	4.9	6.5	11.1	9.8	5.2	4.7	6.2	4.2
경상수지 (억 달러)	44.0	60.0	65.3	—	53.0	60.0	40.1	24.7
수출증가율	19.8	11.6	18.8	12.2	10.4	8.0	11.4	8.5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9	2.7	2.9	2.8	3.0	2.6	2.8
실업률	3.7	—	3.2	—	3.4	3.3	3.3	3.0

의 절대 소비심리는 여전히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감안해 보면, 소비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새해의 경제성장 복원력은 소비회복의 여부가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비회복의 속도가 경기회복의 속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는 것이다. 소비가 회복되면 '내수-수출' 쌍끌이로 성장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소비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못하면 성장률도 4%대로 낮아지면서 'L자형'의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회복의 열쇠는 가계부채와 카드신용불량자 문제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는 2004년 하반기에나 가셔야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소비부양책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다. 다만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소득이 증가되고, 하반기 이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뿐이다.

한편 2004년의 소비자물가는 3% 미만의 낮

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 있으나, 실제 경기회복세가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3. 주요 산업의 내수·수출 호조 예상

새해에는 주요 산업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내수측면을 보면, 2004년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확산 등으로 주요 산업의 내수가 2003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러한 내수 회복세는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가전 등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컴퓨터와 반도체의 경우 노트북 수요 급증과 그 동안 지연되었던 PC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 비PC계열 IT제품의 반도체 수요증대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 주력산업의 새해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의 수출이 새해에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가전, 자동차(부품 포함) 등 수출 5대 업종의 수출증가율은 최소 10.3%, 최대 25%로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국내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주력산업의 생산은 모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그 동안의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극심한 내수침체를 겪은 자동차와 가전은 생산량이 급증하고, 일반기계, 컴퓨터, 반도체, 철강의 성장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만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첨단산업과 전통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새해에도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성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통산업과 경공업의 해외이전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제조업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진행도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2004년 경제의 관전 포인트

2004년의 경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그동안 국내경제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노동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새해에는 특히 4월의 총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어려울 전망이다. 손배·가압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그동안 풀

지 못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공론화될 가능성이 큰데다,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진통이 연중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사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노동시장의 불안 요인이 가중되면 기업의 투자욕 약화는 물론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을 초래해 산업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 그동안 정치개혁 움직임, 정치자금 수사 등으로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국내정치 상황이 새해에도 4월의 총선을 전후하여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는 이해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정부정책은 표류하는 등 경영환경이 안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대체로 1990년대 이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총선이 치러진 해와 이듬해에는 반드시 전국불안의 후유증으로 경제성장률이 정체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없이 반복되던 현상이다. 정치권의 힘이 선거에 집중되면 총선 전까지는 경제회복과 관련된 정책노력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역시 총선을 앞두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단기처방을 선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정치가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나 해외투자 확대 추세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공동화 논란이 일어날 것임은 물론이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불안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주5일 근무제가 대기업에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대체로 여가시간의 증가가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과연 생산성향상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고용시장에는 취업기회의 확대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경기회복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내수부진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하반기에 가서야 풀릴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물량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압력이 하반기에는 구체화될 전망이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하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의 동력인 수출의 신장세가 지속되고 이어서 내수까지 회복되면, 수출과 내수간의 불균형성장이 2004년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달러 약세 압력을 둘러싼 환율갈등은 2003년에 이어 새해에도 우리 경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점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주식투자에 따른 달러공급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엔화 강세의 지속 등으로 원화 강세(원화 환율 하락)의 압력이 높아진 터이다. 새해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환율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5. 경기 순환인가 구조불황인가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는 법인데, 우리 경제에는 과연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어올까? 아니면 봄은 오는데 봄답지 않게 꽃샘추위에 시달리거나 앓을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깊고 깊은 늪에 빠져버린 내수부진도 소비심리가 풀리고 투자심리가 풀리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자위해 보지만, 아직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내년도 경기

(새해 경제의 관전 포인트)

구 분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대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칠레 FTA 등 주요 정책이슈 타결 가능성 • 수출증가 힘입어 경기바닥 탈출 가속화 • 주5일 근무제 실시(긍정적, 부정적 요인 동시 작용) • 카드채 문제 등 금융불안 요인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일정에 따른 정치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 수사, 정치개혁 움직임 등 - 총선전후 정부·국회 경제문제 대처 미흡 - 정당별선명성 경쟁 따른 기업·재벌 정책 잇단 제시 • 노동시장 불안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을 앞두고 노사대립 심화 - 노사관계 로드맵 등 놓고 극한 대립 가능성 • 가계부실·제조업 해외이전 등에 의한 소비 위축, 제조업 공동화, 실업 • 정치자금 수사 여파 분식 회계문제 표면화로 인한 반기업정서 심화, 노사분규 촉발
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EU·일본 등 세계 경제 회복 - 중국 호황 따른 부품 수요 증가 - 반도체 등 IT산업 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대선으로 인한 정치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약달러정책과 원화 및 위엔화 가치절상 요구 • 이라크 등 중동지역 분쟁 격화 가능성 • 북핵문제(해결되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통상마찰 심화

를 전망하는 입장이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여도 여전히 경기흐름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

첫째는 수출이 유례없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다는 사실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 실적에 따라 경기가 좌우되기 마련이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40%를 조금 넘는다. 그런데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황의 늪을 헤매는 우리 경제는 지금 미증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는 수출을 제외한 실물경제의 동향을 보면 경기변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수출이 잘되면 설비투자도 늘고 소비도 덩달아 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을 제외하면, 실물경제는 소비든 설비투자든 쫄쫄 얼어붙고 말았다. 저금리와 수출호조로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인데도 말이다. 심지어는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공장설비의 가동률이 80%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85%에 근접하고 있고, 급증하는 해외수요에 못미처 공급애로를 걱정할 만한데도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그 요인을 찾아본다면, 경제주체들이 소비자나 투자보다 부동산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를 유보한 채 보유현금과 은행대출로 마련된 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우선 사용하고, 기업인들도 전망이 불확실한 투자활동보다는 단기간에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심리적으로 소비확대가 이루어짐직 한데도, 아직 투기소득에 대한 기대가 이를 일축시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부동산투기 열풍이 시중자금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발휘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야말로 부동산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와 내수확대로 이끌어낼 효과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기변동론자들과 구조론자들의 논쟁이 계속되곤 한다. 대체로 경기침체의 초기에는 경기변동론자들의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구조론자들의 주장이 우세해지기 마련이다. 국내경기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요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6. 일본식 장기불황의 조짐은 없는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03년 9월, 한국경제가 신용카드 부실,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불황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맥킨지의 이러한 진단은 한국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초기 구조조정에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부족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것은 미국 IT산업의 호황과 가계대출 증대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는 여신만기 연장조건으로 이자보상배율을 200%까지 올려서 국내총생산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가치파괴 현상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성장산업을 서비스와 하이테크 산업에서 찾으라고 권고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바로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경고이다. 버블붕괴와 부실채권 누적문제로 10여 년간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일본은 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여 왔으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풀린 돈이 금융권 내에서 맴돌기만 하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있다. 그동안 일본경제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잉채무 해소, 설비 및 고용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금 이익창출 기반을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140조엔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역할 미흡으로 소비위축 성장부진 고용악화의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 역시 과거에 양산된 가계 및 신용대출 부실 등의 신용불안을 주요한 배경으로 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고, 부동산경기의 이상기류에 따른 버블 징후 등이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을 연상하게 한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불안한 노사관계 및 중국경제의 강력한 등장 등의 요인들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드시 일본의 경우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동산투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면 우리

경제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다. 수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징후일 수도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장기불황의 암에 걸린 환자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도, 장차 암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종양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 경계해야 할 잠재성장률 하락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전망기관들이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경계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성 기여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4.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4.7%, 이후 5년간(2009-13년)은 이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동안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추정해 왔었다.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였다. 그러나 노사불안, 부동산거품, 신용불량 확산 등 성장저해요인이 방치되고 투자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현재의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이 더욱 낮아져 향후 10년간 3.9%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대로 낙관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투자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생산성 기여도가 지난 9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연 평균 5.4%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다. 국내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분석결과도 비슷하다. 제도, 개선, 대외개방 확대 측면에서 잘하면 성장률이 2003-07년 5.4% 내외, 2008-12년 5.1% 내외로 전망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각 4.8%, 4.5% 내외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잠재 GDP는 한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생산요소들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GDP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률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가능한 성장률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일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감소와 생산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반대로 잠재성장률을 넘는 성장을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잠재성장률이 5%를 넘기가 어렵다는 전망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내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80년대에는 7.5% 수준을 유지하다가, 90년대에는 6.6%로, 2000년 이후에는 5%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향후의 전망치도 5%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체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성장저력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주된 성장요인이었던 인적자원이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고비용·저효율의 교육시스템 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상실, 기업가정신과 노동윤리의 쇠퇴,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디

플레이션 위험 등도 문제다. 기업의 투자의욕 위축도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설비투자증가율이 둔화되어도 생산성 향상으로 만회하면 잠재성장률은 그대로일 수 있다. 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성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수한 인적자본도 투자와 맞물려야만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생산능력 하락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작금의 경기부진이 비단 경기순환적인 요인에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4년에 경기회복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구조적인 불황요인이 존재하는 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동시에 시사한다. 그렇다면 구조불황의 처방도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8. 경제운용의 시사점

무엇보다도 먼저 새해에는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 요인을 상당히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남아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계속 쌓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투자주체인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보인다. 최근에는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들이 대거 발표되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경제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고 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긴 안목에서 장래 비전을 보고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정부가 바뀌거나 내각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투자활동이 위축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천국인 아일랜드는 경제정책이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자랑으로 내세우곤 한다. 비단 외국인 투자가 뿐이라.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기업가라면 그 누구라도 관련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정상이다.

셋째, 시장의 개혁 못지않게 시장활동의 안정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의 발달을 위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부추기는 노력은 당연하고도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시장특성에 따른 대응이 또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단기간에 이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만을 주장한다면 부작용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흑자지속에 따라 원화의 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외환시장의 경우, 때로는 실물경제의 흐름과는 별도로 투기적 요소가 발효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적정환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환율안정이나 환율의 예측가능성이 기업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나서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세계 우수의 경영자원을 자국 내에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 결과는 국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의 생산, 수출, 고용, 선진경영기법의 전수 등 외국인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한 나라 경제의 부침은 세계화된 기업의 투자유치 성과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기업은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동, 자원, 기술, 경영환경 등 요소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지를 따라 생산과 기술개발 근거지를 이동시키면서 국가간의 새로운 분업 구조를 결정하는 주역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나라일수록 경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9. 기업경영의 시사점

2004년의 경영환경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는 것이 확실한 데, 수출여건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적으로 결코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환경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경기에 민감한 데다 수출보다는 내수를 위주로 하는 주류업계로서는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새해에는 기업들이 이른바 '총선경기'를 의식해야 한다. 아무래도 총선 전까지는 노동문제 등 각계의 요구사항이 여과없이 분출되는 데다, 정책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선거 이후에도 정계재편이 진행돼 경제문제는 도외시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저래 기업으로서는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기업으로서는 소비자 기호변화의 트렌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득증가와 개성증가, 젊은층의 트렌드 창출 등으로 의식주의 모든 생활여건이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다. 주류소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국산 주류는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졌고, 품종도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수입주류와 비교해도 견줄 만 하다. 문제는 누가 어느 기업이 어느 제품이 트렌드를 선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이 주류소비의 트렌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일이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주류산업의 경우에도 제조부문 못지않게 서비스부문의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은 전체적으로 제조단계의 생산성은 경쟁상대국 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제조업지원 서비스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다. 설계와 디자인, 물류 및 유통, R&D 등 제조의 앞 뒤 공정에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성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주류산업의 경우만을 특별히 분석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조원가에 비해 부수되는 서비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류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예외가 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새해에 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경제환경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언젠는 기업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겠느냐마는, 2004년 새해는 각별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다행히 우리 주류 업계는 그동안 술한 역경과 규제 속에서도 굳굳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믿고 싶다.

Vigorous writing is concise. A sentence should contain no unnecessary words, a paragraph no unnecessary sentences, for the same reason that a drawing should have no unnecessary lines and a machine no unnecessary parts.

힘있는 글은 간결하다. 한 문장에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한 귀절에는 필요없는 문장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그림에 불필요한 선이 없고, 기계에 불필요한 부속품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 William Strunk Jr -